

화상 토론회·셀카 논평 '온택트 여의도'

코로나 확산에 비대면 전환
토론회·세미나 줄줄이 연기
국회 기관 재택 근무 권고
민주당, 전당대회 방식 고심



국회 '비대면 시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수도권 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의 영상연설을 온라인 생중계하고 있다. 이날 당대표 후보들인 김부겸, 박주민 후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자기격리 중인 이낙연 후보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두 영상 연설로 대처했다. /연합뉴스

코로나 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가 풍속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을 뽑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 정국에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국회 곳곳에 참석 인원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여는 대신 의원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자기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 주자들의 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당분간 보좌진은 전체회의에 상시 배석하지 못한다. 소회의장 등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 따라 잠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소관 기관들 역시 국회 출입 인원은 10명 이내, 회의장 착석은 그중 3명 이내로 제한한다.

또 소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공간 확보 차원에서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한다. 기자들의 회의 취재도 풀단(취재 공유 그룹)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 곳곳에 마련된 운동실 등 직원 휴게 시설도 문을 걸어 잠갔다.

다만 국회 의원회관 내 남녀 의원 건강관리실 중 사우나는 문을 닫고, 샤워실만 열어둔 상태다. 한 의원은 "코로나 때문에 샤워시설에도 의원을 발걸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국회 사무처는 모든 국회 기관 및 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 직원 대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사차출퇴근제(3부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회 구내식당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중식 2부제 도입 방침과 종교 행사를 포함한 모든 동호회 모임과 회식 금지령도 함께 내렸다.

입법 활동을 위해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일 같이 열린 토론회와 세미나도 줄줄이 연기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민주당 고영민 의원은 지난 21일 아동학대 예방 토론회를 의원실에서 앉아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 의원은 "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어 토론회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리를 쥐어 짜내서 하게 됐다"며 "현장 분위기가 조금 덜 나긴 했지만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습득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서 21일 개최한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정책토론회'는 참석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전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셀카 논평'도 등장했다. 자기격리 중인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촬영한 논평 영상을 통해 "재택근무" 근황을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출연 과정에서 확진자와의 간접 접촉이 확인돼 19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튿날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통합당, 이달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라" 박 의장, 시한 못박아 요청...與, 지연시 법 개정 가능성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 시행 한달을 넘기도록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을 이달말로 사실상 묵박했다.

23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박 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에 '정기국회 개최(다음달 1일)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박 의장은 앞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주 원내대표에게 같은 내용을 구두로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이 교섭단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요청을 한 것은 지난 6월 말에 이어 두 번째다.

첫 공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에는 별도로 추천 시한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는 당원적 3명(법무부 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에 더해 국회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통합당이 추천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이 위촉·임명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2명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국회에 추천했다.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도 내부적으로 추천위원 물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추천은 안 한 상태다.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이전에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위헌 소송 판단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통합당이 정기 국회 이전까지 추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추천위원 선임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공수처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차(지난 18일) 전까지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민주 시도당 위원장 '86그룹' 약진

송갑석·김승남·기동민 등 전면에...세대교체 확산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실질적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당 위원장에 86그룹(80년대 대학, 60년대 출생)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86그룹이 다수 위원장에 선출됐다.

서울시당 위원장에는 장성 출신의 성군관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기동민 의원이 단독 입후보해 대의원대회에서 추대됐다.

또 경기도당 위원장은 서울대 농생물학과 81학번 박정 의원이 맡게 됐다. 광주시당 위원장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출신인 송갑석 의원이 추대됐고 전남대 당위원장인 전남대 총학생회장인 전대협 초대 부의장을 지낸 김승남 의원이 추대를 통해 맡게됐다.

충남도당 위원장은 건국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훈식 의원이, 전북도당 위원장에 서울대 82학번 김성주 의원, 충북도당 위원장에 제주대 동문동창회연합회 사무국장을 지낸 이장섭 의원, 세종시당 위원장에 충남대 84학번 강준현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선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86그룹이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86그룹 내에서도 80년대 초반 학번에서 80년대 중반 이후가 당의 전면으로 나서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기 의원은 91년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송 의원은 89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1973년생인 강 의원은 98년에 총학생회장을 맡았다.

같은 80년대 학번이라도 민주화를 성취한 87년 6월 항쟁 이전과 올림픽 꿈나무인 88학번 이후 세대가 다르다. 당초 시도당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진 만큼 내부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데다 원·팀을 흔들지 말자는 기류에 따라 대부분 합의 추대 방식으로 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과거 이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80년대 초반 학번이 당의 허리 역할을 맡았다면 최근에는 85학번 이후의 인사들이 당의 전면으로 나서게 되면서 세대교체 조짐이 확인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2차 재난지원금 불가피"

김부겸, 국가재난기금 조성 제안...진성준 "하위 50%에 지급"

민주당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2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하다"며 재연 마련을 위한 '국가재난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 의원은 "소득 하위 50%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정당국의 부담도

다소 줄어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빠른 결정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9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추석 전에 지급하려면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검토 중인 정책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

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이달 말까지는 봐야 한다"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해야 한다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될 경우 1차 때의 경험이 있는 만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 집행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예결위 오늘부터 결산 심사 2차 지원금·4차 추경 논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24일 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5일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 28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31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등을 통해 정부의 지난해 예산 씬음을 점검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총수입은 473조1천억원, 총지출은 485조1천억원이다.

특히 예결위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4차 추경 편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